

엘로우 퍼시픽이란 시각의 득실: 핵심현장에서 말 걸기

조영한·조영현 지음,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를 읽고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

I. 분과학문을 가로지르는 형제의 협업

이 책이 흥미를 끈 것은 ‘엘로우 퍼시픽’이란 이색적인 —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도 들었다는 — 제목보다는 서로 다른 분과학문에 속하는 형제의 공동작업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명청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문화학자의 협업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형제라는 혈연관계가 과연 분과학문 간의 벽을 넘어 의미 있는 학술적 결실을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서로 다른 학문적 훈련, 다른 성품을 바탕으로 한” 공저자가 결과물에 대해 “절충적이면서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털어놓은 “머리말”을 읽으면서, 평소 학술작업에서 (형식적 학제연구가 아닌) 창조적 협업을 중시해 온 필자로서는 그들의 지식생산과정에 호기심을 갖길 잘했다는 느낌이 왔다.

물론 이런 호기심만으로 긴 서평논문을 쓰겠다고 선뜻 나선 것은 아니다. 마침 필자가 한국이 발신한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기에 소장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응당 감당할 과제라 여겼다. 특히 필자가 그간 관심 갖고 집중 논구해 온 동아시아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주제 목록에 (동아시아에 내재하는) 미국의 역할과 해양아시아도 끼어 있기에 자신의 입론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I. ‘옐로우 퍼시픽’이란 무엇인가?

학술적 저술과 대화할 때의 필수적인 요건은 집필되는 과정을 재현해 봄으로써 그 저술의 근본적 취지를 살피면서 성과에 대해 나름의 시비를 가리는 비평적 독자의 자세일 것이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말하려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된) 열쇠 개념을 검토하는 일로부터 비평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제목으로까지 내세운 ‘옐로우 퍼시픽(Yellow Pacific)’이란 신조어는 무슨 뜻일까.

그것은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역사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식을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에 입각해 재구성하려는 연구목표에 부응하는 서술전략의 소산이다. 직접 들어 보자.

‘옐로우 퍼시픽’은 단일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경험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동아시아라는 공간에서 근대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거대서사이다(“머리말” vii쪽).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선뜻 이해되기 어려울 테니, 합성어를 쪼개 하나씩 살펴보자. ‘옐로우’는 황인(種)을 가리킨다. 이는 “기존에 폄하 및 인종차별의 의미로 사용된 ‘황색’ 혹은 ‘황인종’이라는 함의를 담지하면서, 동시에 현존의 위치에서 스스로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기 승인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인”을 말한다(18쪽). 그다음, 퍼시픽은 물론 태평양을 뜻하는데, 이 책에서는 미국과 그것이 주도한 해양세계를 주로 가리킨다. 공저자가 퍼시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인의 이동과 주체성 형성에 유럽보다 미국이 결정적인 타자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16쪽) 미국은 외부의 타자로서 이 지역 내 타자(예컨대 이전의 일본과 최근의 중국)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이중적으로 구속’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주체 형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들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황인종이라는 이슈를 제기하여, 태평양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작동하는 미국중심주의 그리고 세계질서의 구조 변화 속에서 옐로우/

황인의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한다. 이는 나중에 “미국에서 옐로우/황인의 인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데” 자극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독자에게 어느 정도 요해될 수 있을 성싶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옐로우 곧 황인종 개념을 끌어들이는 문제의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사용되어 온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지금’ ‘여기서’ 황인종이라는 인종적 쟁점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사상사에서 인종 개념의 사용된 맥락을 잠시 돌아보자. ‘사람의 씨’ 내지 자손의 의미로 통용된 인종(人種)이란 한자 어휘가 일본 거쳐 유입된 race의 번역어로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청일전쟁 직후다. 대한제국 시기에 국제 정치를 인종 간의 대결로 파악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을 백인종과 황인종의 대결로 간주하는 시각이 한때 우세했다.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국민이자 동아시아의 황인종이라는 두 차원의 정체성이 융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같은 황인종의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인종 개념은 (천일적) 제국주의 논리로 규정되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강동국, 2006). 그 뒤 한국에서 인종주의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동아시아인 사이에서 상호 혐오주의가 대두하면서 새삼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의 인종주의는 피부색 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본래의 인종주의라기보다 이민족·이문화 등의 문화적 차이를 서열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신인종주의(‘인종 없는 인종주의’)이다(우리 사회에서 논란은 불러일으킨 ‘반일 종족주의’나 반중정서가 이에 해당하지 싶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동아시아인의 상호 혐오주의 같은 것이 다뤄지지 않는다. 공저자가 황인종이라는 인종적 쟁점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즉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인의 열등감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 이로부터 벗어나 ‘능동적이고 자기 승인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을 이론화 작업의 대상으로 삼아 승화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아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황인종담론이 활용된다. 무슨 뜻인지 설핏 이해되나, 이런 문제의식을 담기 위해 황인종이란 개념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동아시아인 주체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레토릭 정도로 쓰인 것이라면 득보다 실이 많을 듯싶다.

이에 비해, 퍼시픽을 미국의 역할을 파악하는 서사로 삼는 문제의식은 잘 납득된다. 이 개념의 역사적 맥락에서 우선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대륙의 한족과 북방유목민족이라는 양대 세력의 각축이 되풀이해 왔고, 그들에게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이후 유목세력이 쇠락하고 대신 해양세력이 부상하자, 대륙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일본·구미)이 각축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어진 한국병합의 국면은 그 갈등을 집중적으로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대륙에서 바다로의 인식 전이와 태평양의 ‘발견’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¹ 특히 청일전쟁으로 보편문명을 자부하던 중화제국의 ‘천하’ 질서가 깨지고 나서 한국인의 문명관과 세계인식이 대전환을 맞이했다. 그때부터 태평양은 한국인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며 서양(특히 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다. 일제에 강점된 이후에도 이런 인식은 지속되었다. 이 인식의 틀이 해방 후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여기에 겹쳐 태평양을 ‘환태평양’으로 인식하는 사조가 유행했다. 1970년대 베트남에서의 패전 이후 닉슨행정부의 정책변화로 등장한 ‘환태평양지역(Pacific Rim)’이라는 전략적 구상은 미국이 이 지역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질서에 통합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다(달릭, 1993). 이것이 한국 안에서 때로는 비판당하면서도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분단체제의 영향 속에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공저자가 퍼시픽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갖는다.

이렇듯 옐로우퍼시픽은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지만 흥미로운 발상이긴 하니, 예단을 갖지 말고 논술과정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공저자는 자신들의 주제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기 위해 세 가지 서사를 중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근대성은 물리적 이동 없이 자신의 로컬 영역에서 형성되었다는 것, 둘째, 동아시아 근대성은 외부와 내부의 이중적 타자와의 관계성 속

¹ 퍼시픽 곧 태평양과 한국사가 만난 첫 단계는 16세기 후반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한역(漢譯) 세계지도(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坤輿萬國全圖』 등)의 전래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었다. 태평양 용례와 관련된 부분은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콜로키움(2019. 11. 19)에서 이뤄진 고정휴 교수의 발제에서 시사를 받았다.

에서 형성된다는 것, 셋째, 동아시아 근대성은 이상적인 타자를 아메리카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 세 서사 중 마지막 것이 공저자의 문제의식을 돋보이게 한다. 그들의 말대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는 사회진화론적·인종적·대중문화적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와 정치 지배 영역에서도 나타나기에 ‘폭력의 상징’이자 ‘자비와 풍요’의 이미지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경제성장기와 지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요컨대 공저자는 (필자가 보기에 사실 무슨 이론이라기보다 서사장자인) 옐로우 퍼시픽을 통해 “동아시아 민족·국가 및 사회가 보여 주는 하부-제국주의적 욕망과 민족-지역-세계 속의 삼중적 의식 형성”의 특성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는 탈식민, 탈제국 및 탈냉전의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자 한다(39쪽).

이제부터 옐로우 퍼시픽 그리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인 세 가지 서사가 이 책의 구성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인 탈식민·탈제국·탈냉전의 성찰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지 찬찬히 검토해 보자.

III. 동아시아 근대성의 역사와 근대 담론의 새로운 가능성: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공저자의 협업이라 하지만 대부분(서장인 1장, 종장인 9장 및 7장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이미 발표한 개별 논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머리말”). 그렇다면 각각의 집필 부분을 쪼개 읽고 나서 전체를 다시 음미하는 것이 저서가 집필되는 과정을 재현해보면서 성과를 가리는 비평적 태도에 적합한 방법이겠다. 다소 나열식 비평이 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편 한편에 대한 존중도 표할 겸 이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문화학자인 조영한이 이미 영어로 발표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기며 손봐 수록한 장들부터 살펴보겠다(1, 9장도 논리의 흐름으로 봐 그의 집필 부분으로 짐작되나, 일단 공저자의 공유된 문제의식으로 간주하여 앞에서 이미 논평했고 또 마지막에 다시 다룰 터이다).

그는 제1부 ‘동아시아 근대성의 역사적 조망’에 실린 글에서 한국의 ‘식민지근대성’ 논란(3장)과 ‘동아시아 야구의 궤적’(4장)을 분석한다. 언뜻 보면 거리가 먼

연구소재 같지만, ‘이중적 구속’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연결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근대성의 특징을 들여다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제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동시적 지배를 뜻하는 ‘이중적 구속’은 근대적 삶의 양태가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피식민자에 의해 전복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려 주는 조건이다.

저자는 ‘식민지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논쟁을 통해 식민조선에서 식민-근대의 이중성에 대한 반응과 함께, 세계지식 체계에서 한국(주변)-미국(중심)의 종속관계라는 이중적 딜레마를 한국 지식인들이 안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한국 학계가 식민-근대에 대해 보이는 불편함 혹은 양가적 감성은 “학문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식민 상흔이 구조적이고 심상적으로 내재하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연구자들의 ‘부채’”라는 것이 그의 핵심 논점이다(151쪽). 이는 세계 지식생산 체계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학계에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학계의 구조적이고 현재적인 한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동아시아적 문제의식을 적용하여 한국이 경험한 식민경험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유사한 역사적 구조를 가진 비서구권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해 현재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식생산 분업체계를 극복하는 데서 열린다. 이것이 아마도 저자가 말하는 탈식민화와 동반하는 탈제국화 과정일 터이다.

야구 역시 근대성과 식민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상징이다. 미국인에 의해 도입되고 일본의 가공(민족주의 상징이 된 사무라이식 야구)을 거쳐 한국과 대만이란 식민지에 전파된 야구는 근대화 초기에 형성된 아시아-일본-미국이라는 삼각모텔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물론 이 특징은 종전 후에도 지속된다. 이로부터 야구가 만들어 놓은 전 지구적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야구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도전하고 때로는 승리를 거두었듯이, 일본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에서도 야구는 식민지배에 균열을 만들거나 때로는 피지배자들에게 반식민 그리고 민족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115쪽)는 점도 간파된다. 이로써 이중적 구속이 작동하는 한계에서 그것이 전복 가능

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상의 두 편의 글이 역사적 조망에 해당한다면,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 한류(6장)와 한국의 동아시아담론(7장)에 대한 검토다.

저자는 한류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먼저 한국의 기존 연구의 관점을 문화민족주의적 시각, 신자유주의적 시각 및 탈국가적 지역주의 시각,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눠 검토한다. 그의 입장은 세 번째에 접근하는 듯하나,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이뤄진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뜻하는 (협의의) ‘동아시아의 대중문화’의 틀 속에서 이론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류와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특정 국가가 발신한 문화라기보다 상호참조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반복되는 흐름으로 파악한다. 특히 한류는 문화지리 속에서 지역이나 국가 등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연결고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류를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소비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구성 중인 동아시아 감수성(sensibility)’으로 이론화하자고 제안한다.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거론되지 않는다. 그저 동아시아 감수성 속에 글로벌 문화가 민족적·지역적 문화에 착종된(embedded) 채 서로 경합하는 양식이란 점만이 제시될 뿐이다. 동아시아 대중문화 상품을 함께 소비하는 동아시아인들의 경험, 기억, 현재성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매개되고 재구축되는 그들의 정체성 및 감수성을 분석하겠다는 이론 작업은 나중의 과제일까.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는 사례로 한국발 동아시아론이 점검된다. 동아시아담론의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저자는 그중 ‘동북아시아의 동아시아론’에 집중한다. 이 부분에서 특히 노무현정부가 제기한 ‘동북아시아대’ 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계열의 담론—그는 ‘동북아시아의 동아시아론’이라 부르는데, 뒤에서 보듯이 보통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을 분석하면서, 동아시아의 유연한 경계, 다양한 주체, 평화지향적 역사인식, 자발적인 대중문화의 네 영역에 걸쳐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사적 영역을 통한 동아시아 교류 및 상상의 가능성은 보다 장기지속적이고 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295쪽). 요컨대 그에게 한국발 동아시아론은 1990년대

의 “서구적 근대화를 한국과 동북아시아에서 실현하는 동시에 넘어서고자 하는 역사적 욕망이 본격적으로 재현된 옐로우 퍼시픽의 대표적 유비(analogy) 중 하나”이다(257쪽).

‘신냉전기’로 곧잘 인식되는 지금 (곧 이 글이 집필된 2010년대 중반), “유행이 지난 담론처럼 여겨지는”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절망과 희망을 생각해 보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민족주의에 대한 자성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서 계속 실천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 연결지어 생각하려는 사고나 정서”는 “열등한 것이 아닌, 아류제국으로서가 아닌 탈식민, 탈근대, 탈제국, 탈냉전을 위한 동아시아론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302쪽).

한편, 중국사 연구자인 조영현은 동아시아 근대성의 역사적 조망을 위해 명청대의 ‘대운하시대’(1415~1784)에 주목한다(2장). 중국이 해양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명청조의 해금(海禁)정책이 풀린 개항 이후라는 종래의 해석에 익숙한 독자라면, “적어도 1415~1784년까지 370년 동안의 중국은 ‘대항해’에 대한 의지가 단순히 결여된 시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외부적인 ‘대항해시대’에 대응되는 ‘대운하시대’였다”(76쪽)는 저자의 설명에 끌릴 것이다. 이 시기에 중국인은 국가 안보와 지역 이윤 사이의 긴장과 절충을 꾀하면서, 대체로 서북 지역으로 포괄되는 육상세력과 동남지역으로 포괄되는 해상세력을 구분하되 일정 부분 상호연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북 변경지역과 동남 해양 지역의 대외무역 역시 비록 통제된 거점과 암묵적인 밀무역의 형태이긴 하나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특히 16세기부터 은을 매개로 중국경제는 ‘지구적’ 무역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해양력의 증대 없이도 중국은 18세기 후반까지 세계경제의 ‘공장’이자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역과 이윤의 욕망 역시 대운하를 중심으로 한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 충족시키고 있었다.”(74쪽)

이런 식으로 저자는 (이 책의 주제인) 태평양에 접속한다. 아메리카는 1784년 즉 대운하시대의 종점인 동시에 미국과의 상업교류 및 영향력의 교차가 시작되는 ‘터닝포인트’에 ‘아메리칸 임팩트’로 그 모습을 비친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한때의 강점이 약점의 근원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던 18세기 후반

의 역설적인 상황”에서 찾는다(76쪽). 즉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대운하시대까지 유효했던 국가권력의 안보와 지역상인들의 이윤 사이의 절충이 효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 결과, ‘100년의 굴욕’의 역사로 들어간다.

이제 중국은 그 비정(悲情)의 역사를 극복하고 대국으로 굴기했다. 이 현상은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새로운 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중국 정부와 지식인의 합작품인 청대사 새로쓰기 프로젝트(淸史工程)를 검토한다(5장). 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중국이 경험한 근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의 정체성 및 지향성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고 판단해서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굴기는 과거 중화제국의 회복”이다. 따라서 청조를 중화제국의 마지막 왕조이자 현 중국이 영유하고 있는 영토적·민족적 유산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청사 편찬은 성세가 되면 사서를 편찬한다는 전통(盛世修史)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18세기 ‘강희·건륭제 융성기(康乾盛世)’에서 역사교훈을 얻으려는 중국 정치지도부와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된 의식은 ‘중국식 근대화’ 담론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구미학계의) 신청사 연구의 주선율인 탈중화적 시각을 중국인이 어느 정도 수용해 신중화주의의 혐의를 벗을지, 그리고 이 시도가 세계사적 맥락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를 관점 포인트로 삼자고 제안하는 데 머물 뿐이다. 중국 안팎에서 열띤 논쟁거리인 중국발 ‘대안적 근대성’ 논의와의 접점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지금 중국의 역사서술이 그러한 양상이라면 한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이를 보여 주기 위해 저자는 현재 고교 교육현장에서 채택되는 『동아시아 교과서』 4종(2018년 현재)을 검토한다(8장). 그 결과, “문명의 강조로 세계사를 유럽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국가사를 자국중심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낸다(305쪽). 동아시아 교과서는 유럽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대안모색이자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지적 탐색의 결과물이고, ‘글로벌 히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교과서에 서술된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의 참신성과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여기에 “은 유통과 짝을 이루는 기후 변동 및 자연재해에 관한 서술이 추가될 때 동아시아와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관

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336쪽). 요컨대 저자는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를 균형있게 포착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를 위해, “글로벌 히스토리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동아시아사 내지는 대륙과 해양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지구적 광역 경제권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사 연구”와 이에 바탕한 교과서 서술을 제안한다(343쪽).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지금 여기로부터의 관점이 담긴 동아시아의 ‘다양한 근대성’을 탐구하는 방식인 셈이다.

IV. 한국 동아시아담론 계보에서의 위치를 묻다

이제까지 각 장에서 공저자가 들려주고자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데 집중했다. 각각에 대해 더 논평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상 유기적 연관도가 약하다는 인상이 짙게 남는다. 옐로우 퍼시픽 개념이 글 전체를 촘촘히 꿰뚫고 있지도 않고, 세 가지 서사의 목표인 탈식민·탈제국·탈냉전의 성찰(특히 탈냉전)이 제대로 스며들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이는 기왕에 쓴 글들을 골라 재구성하다 보니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가 모자이크처럼 짜여 드러내는 윤곽에 대해 끝으로 논평하는 것이 한층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될 터이다.

그 윤곽은 이 책의 부제인 ‘다중적 근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새로운 근대성’ 등의 용례는 다양한 근대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데 불과하다. 너무나도 많이 논의된 근대성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이자 서사범주”라는 견해도(제임슨, 2020) 있는 만큼 이 개념을 안 쓰든가 굳이 쓰려면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엄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해 아쉽다. 뿐만 아니라 다원적이며 토착적인 근대성의 패러다임은 이미 국내외 술한 논자들에게 의해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다. 필자는 이 논의가 (자유주의적인) 다원론적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기준점을 늘리고 다원화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구조적인 위계질서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미와 다른 근대성을 구상하는 일은 구미중

심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너무 쉬운 해결책이다. 근대성을 연구과제로 삼는 중요한 이유가 역사적 근대인 자본주의시대가 우리 삶에 발휘한 압도적인 규정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임을 환기시키고 싶다.

공저자가 의도하는 바 ‘동아시아 근대성 형성의 경험’을 옐로우 퍼시픽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그리하여 한국 안팎에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작동하는 미국중심주의 그리고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에서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현재적 문제의식 속으로 복원”(366쪽)하려면, 근대 극복에서 핵심 난관인 (일국 차원에 머물지 않는) 자본주의 문제와의 본격적인 씨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윤곽은 ‘인터-아시아적 실천’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민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에 근거해 이론을 생산하는 과제라고 공저자는 말한다. 여기에서 아시아 지식인 내부의 상호참조(Inter-Asia referencing)는 관건적 요소다. 필자 자신 그 흐름을 주도한 ‘아제서원(亞際書院, Inter-Asia School)’ 활동에 깊이 간여해 왔기에 공감하는 바 크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빈번히 지적 열등감이 거론되고 그 극복의 길이 동아시아 ‘지금’ ‘이곳’에 기반한 이론 생산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되풀이 표출되는 ‘이론화’ 필요성이 필자에게는 강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물론 공저자 간에 그에 대한 온도차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 길이 (공저자가 기대하는) 탈식민·탈제국·탈냉전의 성찰로 향하려면, ‘지금’ ‘이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료해지고, ‘누구’를 향해 어떤 언어로 쓰는지도 날카롭게 의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서구의 어느 먼 곳으로 눈길을 줄 일이 아니라, 아시아 지식인 내부의 상호참조, 특히 한국의 동아시아론의 계보를 짚어 보고 그 속에서 공저자의 작업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함이 마땅하다.(물론 제1장이 아니라 제7장에서 다루지긴 하나 담론의 현상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이 작업이 선행될 때 (탈민족주의나 탈식민주의 등 구미학계의 주류 사조에 기대기보다) 내재적 논의로서 그 뿌리가 단단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생성·발전한 동아시아담론은 당연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 한 갈래가 (필자가 당사자의 하나로서 주도해 온) ‘비판적 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 대안

체제론'으로 불리는 계열이다.² 이는 정세론과 문명론을 겸하는 담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유형의 동아시아담론이 1990년대 초라는 시대상황에서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보 속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특히 20세기 초 제국주의·아시아주의·민족주의가 협력과 경쟁을 하던 사상지형에서 안중근처럼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과 그 긴장)을 감당하려 한 흐름에 닿아 있다(강동국, 2009).

이것이 식민지를 거쳐 냉전기의 제3세계 인식을 매개로 하여 탈냉전기 지정학적 변화의 국면에 '귀환'한 궤적을 여기서 길게 논의할 계제는 아니다. 단지 2000년대 이래 필자는 그 계보를 이으면서 '이중적 주변'과 이를 더 발전시킨 '핵심현장'이란 발상에 천착했음을 밝혀 두고 싶다.³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연구자의 경험에서 출발하되 구조적 동일성을 가진 다른 지역 — 당장은 분단된 한반도, 오키나와, 타이완 등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필자에게 '지금' '여기'인데, 얼마든지 그 경계의 확장은 가능하다 — 과의 연계(곧 연동하는 동아시아)를 통해 한반도중심주의란 오해를 푸는 동시에 분석과 비교의 단위를 국가에서 현장으로 재조정하는 길을 찾은 것이다.

필자의 이런 작업은 '이론'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늘 지적 자극을 준 동아시아 동료들에게 '통찰'로 되갚는 상호작용을 바랐을 뿐이다. 다행히 동아시아에서 이 성과에 대해 얼마간의 반향이 나타났다.⁴ 그리고 최근 이 '핵심현장'을 통해 여러 저항들이 지역을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의 장을 확인하고 상상한 영어권의 성과물도 나왔다. 지식생산 과정에서 특정국가(예컨대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로부터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분석이 나올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비판하는 영어권 학계의 주류 시선과 그들이 고투하는 과정에서 "관계적이고 초국가적인 틀을 사용해 다시 다듬을 필요"를 느끼던 차, 필자의 '핵심현장'을 접하고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술회를 올림 있게

² 동아시아담론을 여러 연구자가 저마다 유형화한 바 있다. 그중 윤여일은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대안체제론, 발전모델론, 지역주의론의 네 계열로 구분한다(윤여일, 2016).

³ '이중적 주변' '핵심현장' 등 주요 개념에 대해서는 백영서(2013) 참조.

⁴ 白永瑞(2016a, 2016b). 졸지의 중국어판과 일어판에 대한 논평으로 王前(2018) 및 池上喜彦(2017) 참조.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다(Song and Hae, 2019).

이 일화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공저자가 열린 자세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학계,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드물게도) ‘거대서사’를 꿈꾼 대담함을 지지하며, 학술쟁점에 비평적으로 개입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유에 대해 고민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고찰하는 데 통찰을 얻었다는 공저자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작업을 비평할 기회가 또다시 오기를 고대한다.

투고일: 2020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1일

참고문헌

- 강동국. 2006. “근대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5권 1호.
 _____. 2009.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문화사.
- 딜릭, 아리프. 1993.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창작과비평』 봄호.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창비.
- 윤여일. 2016. 『동아시아론: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돌베개.
- 제임슨, 프레드릭 저. 황정아 역. 2020. 『단일한 근대성』. 창비.
- 白永瑞. 2016a. 『橫觀東亞:從核心現場重思東亞歷史』. 臺北: 聯經出版社.
- 王前. 2018. “何谓从周边看中国:以宫崎市定和白永瑞为例.” 许纪霖·刘擎 主编. 『知识分子论从』 第15辑, 上海: 江苏人民出版社.
- 白永瑞. 2016b. 『共生への道と核心現場: 實踐課題としての東アジア』. 東京: 法政大學出版部.
- 池上喜彦. 2017. “東アジア論壇に向けて: 共生への道と核心現場が誘う世界.” *Review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Center for Asian and Pacific Studies, 成蹊大學), No. 42.
- Song, Jesook and Laam Hae, eds. 2019. *On the Margins of Urban South Korea: Core Location as Method and Praxi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